

광주법원·검찰  
국감 들여다보니

골프까지 친 전두환 불출석 재판이라니... 이해 안돼  
성범죄자 야간외출제한 안해 2명 또 성범죄 저질러  
늘어지는 재판·구속영장 기각률 급증 문제 등 지적

# 국민 정서와 먼 재판·편의적 기소유에 남발 질타

## 여·순사건 재심 3건 신속한 재판 진행 촉구

“전두환씨가 불출석으로 재판을 받게 적절했느냐”, “억울함이 없도록 (법원이) 정의에 부합하도록 해달라”, “수사는 당사자 억울함 푸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겠나”.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광주지·고법, 광주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법정형이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사건이 갖는 의미,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한 재판 진행 인지를 따져 물었다. 또 여·순 사건 재심 진행 상황, 늘여지고 있는 재판 및 부실한 선고로 인해 발생한 성범죄에 따른 비판도 잇따랐다.

◇“불출석 허가 적절했는지 국민 비판을 따갑게 경청해야...”=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주당 의원은 전두환씨 재판과 관련, “전처처럼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사례가 또 있는가”라고 질의한 뒤 “파악해보지 못했다”는 박병철 광주지법원장에게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법정형은 경미 사건 기준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사건이 갖는 의미, 피고인의 태도, 국민감정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며 “불출석 허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 비판을 따갑게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전두환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골프도 치고, 심지어 12·12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자리를 가졌다”고 지적한 뒤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 보호보다는 법원을 찾는 5·18 당사자 및 광주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결정했겠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이 “여전히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최초 발표 책임자, 집단 학살 책임자, 북한군 배후설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범죄자에게 ‘야간외출제한’ 안했더니 야간에 또 성범죄...”=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위추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과 대상자에게 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제한’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야간 시간 (매일 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성범죄 발생으로 이어진 데 따른 법원의 책임론을 따졌다.

윤 의원은 “올 들어 8월까지 광주지법에서 야간외출제한 준수명령을 부과받지 않은 전자발찌 대상자 2명이 야간시간에 재범을 했다”면서 “법원의 잘못으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해당 대상자들은 간간상해·강제추행

등의 재범을 저질렀다.

윤 의원은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광주지법의 경우 전자발찌 부과대상자 34명 중 3명 (8.8%)에겐 야간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반면, 성범죄 (29명), 살인 (1명) 등 31명 (91.2%)에 대해서는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재심... 신속히 진행해달라”=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지법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여·순사건 재심이 3건 접수된 상태”라며 진행 여부를 묻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오후에 진행된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광주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도 지적했다. 광주지검 검사들이 직접 청구 구속영장 기각률은 29.6% (2019년 9월~2020년 8월)로 전년도 (2018년 9월~2019년 8월) 18.2%보다 11.4%가 늘었

다. 같은 기간 대전지검 (-2.2%), 전주지검 (-6.8%), 제주지검 (-7.0%) 등이 감소한 것과 달리 유일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여성이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는데도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추가 수사 없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해당 이주여성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인용한 사례를 지적하며 검찰의 편의적인 기소유예 남발 문제를 꼬집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직무수행 곤란 이유 송치의견서 비공개 위법’ (광주일보 5월 6일 6면) 기사와 관련, “항소했느냐. 고소인 입장에서 송치의견을 공개하지 않으면 답답했을 것 같다. 실무검사들이 적극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며 광주지검장에게 주문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수사관 기피 신청 올 153건 광주·전남경찰 신뢰 회복 시급

광주·전남에서 경찰을 믿지 못해 기피하는 경우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찰의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원주 의원 (천안 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이뤄진 수사관 기피 신청건수는 153건 (광주 80건·전남 73건)으로, 민원인 신청대수로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는 104건 (광주 62건·전남 42건)으로 나타났다.

기피 신청은 2018년 178건 (광주 80건·전남 98건)→2019년 204건 (101건·103건)으로 증가 추세로, 올해 8월까지 신청건수도 153건 (광주 80건·전남 73건)에 이른다.

기피 신청 사유로는 공정성 의심이 134건 (광주 75·전남 59)으로 87.5%에 달했다. 수사를 맡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민원인의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담당 경찰을 바꿔주는데, 이같은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6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58%에 그쳤다. 광주의 경우 78%로 평균보다 높았다.

기피 사유로는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 ▲사건 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지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불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행불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전남 3년간 17명... 전국 세번째

지난 3년간 전남에서 행방불명된 뒤 여태 찾지 못하고 있는 아동·장애인·치매환자가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수치로, 적극적인 소재 파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장애인·치매환자 17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이 각각 8명, 치매환자 1명 등으로, 부산 (22명), 서울 (18명) 다음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도 아동 3명과 치매환자 1명이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29만원 밖에 없다는데... 전두환 어떻게 할 겁니까”

### 박주민 의원, 벌금형 선고 때 집행 방법 물어

“29만원 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두환씨 재판과 관련, 여환섭 광주지검장을 향해 “벌금형 선고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전씨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박 의원은 재판 선고 기일이 예정된 상황에서 형량을 언급하는 부적절함을 알고 있다면서도 “29만원 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질의에 웃음을 감추지 못한 의원들도 눈

에 띄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전씨 추징금 환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면서 “혹 벌금형이 선고되면 집행 과정에 신경써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1997년 뇌물수수 및 균형법성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오랫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검찰은 그러나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재산 목록을 확인, 현재까지 1214억원을 추징했다. 991억원 (45%)은 미납된 상태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물어요  
13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버스승강장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집합제한 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13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버스승강장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집합제한 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